

2026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 정오표

p29 사례 07 문제

수정 전	수정 후
<p>乙은 甲과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승낙서를 작성하였다. 토지승낙서에는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. 乙은 甲 소유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A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乙이 제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과의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. <u>乙이 A시장에 대해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신청을 하고 A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A시장의 거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. (20점)</u></p>	<p>밑줄 부분 수정                  乙 → 甲                  甲 → 乙</p> <p>甲이 A시장에 대해 乙에 대한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신청을</p>

p36 사례 09 목차 II

수정 전	수정 후
<p>II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여부                  1. 의무심판의 대상</p>	<p>II 행정심판의 대상                  1. 행정심판의 대상                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2. 행정심판법상 처분                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 한다.</p>

p58 사례 16 3. 사안의 해결

수정 전	수정 후
<p>甲에 대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행정사법 시행규칙 [별표]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가중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중제재의 위험성을 방지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.</p>	<p>甲은 A시장으로부터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본다.</p>